

총체적 위기 국면의 자본주의에서 민주주의 혁명의 과제: 연속혁명의 관점

정성진(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디커플링’되고 있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오늘날 자본주의는 경제위기, 지정학적 위기, 기후위기,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 등 총체적 다중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 세기말 옛소련 붕괴 이후 만연했던 ‘민주주의적 자본주의’가 영원할 것이라던 일부의 기대는 산산조각났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영원할 것 같았던 공존은 파국을 맞이하고 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디커플링(decoupling)’되고 있다. 21세기 자본주의의 총체적 위기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지닌 내적 논리, 즉 이윤을 저하 위기와 물질대사 균열, 제국주의적 경쟁(경제적 및 정치군사적 경쟁)에서 비롯된 필연적 결과이다. 한계에 봉착한 자본축적은 기후위기와 중첩되면서 세계는 자원과 에너지가 빈번하게 고갈되는 ‘항구적 결핍 경제’(사이토 고헤이)로 진입하고 있다. 총체적 다중 위기 국면에서 민주주의는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살 곳과 식량을 잃은 수억 명의 기후 난민이 발생하는 가운데, 글로벌 자본가 계급은 자원을 독점하고 자본축적을 위해 대중을 배제하는 강력한 권위주의 국가 장치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은 위기 해결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 같은 극소수 테크 억만장자들의 이권을 수호하기 위해 ‘선택받은 자들만 살아남으면 된다’는 극단적인 선민사상에 경도되어 있다. 알고리즘 및 데이터를 통해 대중을 감시·통제하는 ‘테크노 파시즘’과 ‘에코 파시즘’(‘기후 모택동주의’)이 도처에서 발호하고 있다. 총체적 위기 국면에서 민주주의와 대중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공존의 신화에서 벗어나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지닌 구조적 한계와 기만성에 정면으로 대처해야 한다.

우드(E. M. Wood)에 따르면 자본주의에서는 ‘정치적 영역’으로부터 ‘경제적 영역’이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영역으로 분리되면서, ‘정치적 영역’에서는 ‘1인 1표’의 논리가 작동하여 ‘민주주의의 원리가 형식적으로나마 작동하는 반면, ‘경제적 영역’의 표면에서는 ‘1원 1표’의 논리가 성립하지만, 그 이면, 심층에서는 자본의 노동 착취 및 이윤과 축적의 극대화를 위한 자본의 전제(despotism)가 관철된다. 자본가계급에게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자신들의 경제적 권력과 이윤 축적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이므로, 노동자 대중이 충분히 통제되거나 자본주의의 규칙 내로 훈육되지 않는 한 자본가계급은 온전한 민주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 자본주의에서 민주주의는 오직 ‘정치적 영역’에서만, 즉 정치적 민주주의로만, 그것도 실은 ‘과두제’일 뿐인 대의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와 한정된다. 정작 노동자 대중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일터, 투자, 자원의 배분 같은 ‘경제적 영역’의 주요 결정은 민주적 통제 밖의 영역으로 밀려나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에서 ‘경제적 영역’은 ‘렌트 자본주의’(사사키 류지)라는 새로운

수탈 체제가 지배하면서 민주주의의 숨통을 더욱 조이고 있다. 이윤을 저하 위기에 직면한 거대 테크 자본은 인류의 공동 지식과 데이터, 네트워크 등의 ‘디지털 커먼즈 (commons)’를 인클로저·독점하고, 대중을 ‘디지털 프롤레타리아트’로 전락시켜 막대한 렌트를 수탈하고 있다. 총체적 위기 국면의 자본주의, ‘렌트 자본주의’, ‘테크노 자본주의’에서 국가는 ‘상대적 자율성’의 허울을 벗어 던지고 자본의 주구가 되었다(트럼프, 이재명 정부 등). 자본주의에서 주류 정당들은 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국힘에서 민주당으로) 거대 자본의 이해관계에 복무하고 있다. 국가는 이제 거대 테크 자본의 직할령이 되었다.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 대중이 부유세 등 자본의 이윤을 위협하는 민주적 요구를 제기할 때면 국가는 주저 없이 파시즘으로 돌아선다.

민주주의의 위기와 포스트자본주의 대안

총체적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에서 자본가계급의 이윤과 기득권 유지에 대해 민주주의가 장애가 되면서 파시즘이 전지구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에서 파시즘에 대항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본주의 틀 내에서의 개혁(‘좋은 자본주의’)이나 단계적 혁명(1단계: 민주주의 혁명->2단계: 사회주의 혁명)은 더 이상 실행가능하지 않다. 더 이상 ‘그린 뉴딜’이나 규제 중심의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좋은 자본주의’)의 실험으로는 ‘항구적 결핍 경제’로부터 오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막을 수 없다. 심화되고 있는 파시즘과 기후위기가 ‘제3차 세계대전’과 기후붕괴라는 야만, 아마게돈으로 치달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에 ‘비상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벤야민). 대안은 ‘어소시에이션’에 기반하여 민중(demos)의 권력(kratos)을 경제 전반으로 아래로부터 직접민주주의적 방식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주의에서 민주주의는 ‘관계자의 출입금지’의 표지 앞에서, 즉 ‘일터의 문 앞’에서 멈추었다는 점을 직시하고, 이 한계를 전면적으로 타파하는 작업장 민주주의를 쟁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장의 강제에서 인간의 삶을 분리해 내는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투자의 사회화’, ‘생태적 참여계획경제’ 등, 포스트자본주의의 제도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투표소에만 갇혀 있던 민주주의를 일터와 생존의 현장으로 끌어내는 대중 운동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투쟁은, 그 시작이 비록 자동차 진입 금지나 화석연료 채굴 반대 같은 방어적 환경 투쟁일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자본의 소유권과 이윤 논리라는 장벽을 전복하는 방향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즉 오늘날 자본주의에서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대중의 투쟁은, 필연적으로 자본의 이윤 논리 자체를 철폐하고 포스트자본주의로 이행하는 ‘이행기 요구(transitional demands)’가 된다(트로츠키). 자본의 이동과 생태 재앙은 국경을 가리지 않기에 이 투쟁은 전 세계 대중의 국제주의적 연대 속에서만 승리할 수 있다. 21세기 인류가 ‘에코파시즘’, ‘테크노 파시즘’, ‘제3차 세계대전’, ‘기후붕괴’라는 야만과 아마게돈을 저지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포스트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연속혁명’은 필수적이다.

‘부르주아 혁명’과 ‘2단계 혁명’의 허구

이와 관련하여 ‘부르주아 혁명’의 성격과 위상을 둘러싼 트로츠키의 연속혁명론과 스탈린주의 2단계 혁명론 간의 논쟁을 복기할 필요가 있다. 스탈린주의의 주요 요소의 하나는 자본주의가 덜 발달한 나라가 사회주의로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진보적’ 자본가 계급(‘민족자본가 계급’ 등)이 주도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2단계 혁명론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부르주아지는 노동자 대중의 혁명적 진출을 두려워하여 언제나 민주주의 혁명의 동학에 제동을 걸었다. 이른바 ‘부르주아 혁명’의 본질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본축적의 조건을 확립하는 것일 뿐이다. 즉 ‘부르주아 혁명’은 통상 주장되듯이, 정치적 민주주의를 수립하는 과정이 아니라, 자본축적이 요청하는 국가형태를 수립하는 과정이었다(N. Davidson). 비스마르크의 독일이나 메이지 유신처럼 자본주의는 태생적으로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와 친화적이었다. 부르주아지가 주도했다는 기존의 ‘부르주아 혁명론’, 또 이와 한 세트로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존’ 혹은 ‘선순환’을 전제했던 스탈린주의 2단계 혁명론은 역사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허구일 뿐이다. 반면, 노동자 대중은 민주주의 혁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민주주의 혁명을 위한 투쟁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여 민주주의 혁명의 과제와 함께 반자본주의 사회주의 혁명의 과제를 결합하여 연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본 트로츠키의 연속혁명론은 20세기 이후 혁명운동사에서 그 보편적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 투쟁: 연속혁명론적 관점

1987년 6월항쟁과 7,8,9월 노동자 대투쟁, 2017년 ‘촛불 혁명’, 2024-25년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세 번의 거대한 민주주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오히려 ‘헬조선’으로 치달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그 민주주의 투쟁들이 민주주의 혁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중도반단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연속혁명론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노동자 대중은 독재를 무너뜨리거나 쿠데타를 저지한 뒤 스스로 권력 기구를 수립하는 길로 연속적으로 나아가지 않고, 자유주의 부르주아 정치인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자기 제한’ 전술(2단계 혁명론)을 반복했다. 실제로 지난 세기 이후 한국의 진보좌파들은 상호 간의 경쟁 대립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주의 2단계 혁명론을 공유했다. 예컨대 1987년 국면에서 경쟁했던 ‘NL’과 ‘PD’는 모두 모종의 ‘민주주의 혁명’을 ‘사회주의 혁명’에 앞선 1단계 혁명으로 설정했다. ‘NL’이 ‘반제반봉건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주장한 반면, ‘PD’는 ‘반제반독점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주장했다. 둘째, 민주주의에 대한 노동자 대중의 열망은 자본의 소유권과 이윤 논리와 충돌하는 반자본주의 투쟁과 조치들로 ‘성장 전화’하지 못하고 매번 부르주아 선거판으로 흡수되어 혁명의 동력을 상실했다. 셋째, 집권한 ‘민주정부’ 및 ‘진보좌파’ 대다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존’ 또는 ‘선순환’의 허구에 미혹되거나, 혹은 ‘정치와 경제의 분리’라는 착시로 인해, ‘경제적 영역’, 즉 자본의 전제가 관철되는 잉여가치의

착취 영역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데 실패했다. 이는 2024-25년 ‘빛의 혁명’ 덕분에 집권한 이재명 정부에서 이전보다 더 심각하다. 현 정부에서는 ‘소득주도 성장’ 같은 문재인 정부의 케인스주의적 개혁 정책이 폐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의 트레이드마크였던 기본소득도 싸구려 장식품으로 전락했다. 그 대신 ‘주식 자본주의’, ‘렌트 자본주의’, ‘테크노 자본주의’ 등 자본의 이윤 논리 그 자체가 국정 과제로 전면화되고 있다. 현 정부의 ‘주식 자본주의’는 자본의 논리 자체인 ‘1원 1표’의 논리와 ‘물상화’ ‘형상화’의 메커니즘(사사키 류지)을 자본가계급은 물론 전 국민 대중의 ‘일상의식’, ‘상식’으로 내면화하면서 반자본주의·포스트자본주의의 충동을 무의식의 유토피아로 밀어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중장기적으로는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을 극한으로 격화시켜 경제위기와 극단적 불평등, 기후위기, 전쟁을 일상화하면서 ‘마지막 비상구’마저 닫혀진 자본주의에서 민주주의의 붕괴, 각자도생과 극우 포퓰리즘, 파시즘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하지만 이런 비관적 시나리오는 반자본주의 혁명과 포스트자본주의로 연속적으로 ‘성장 전화’하는 노동자 대중의 민주주의 투쟁의 고양에 의해 저지될 수도 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를 버릴 것인지, 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 자신의 생존 그 자체를 위해서 자본주의를 버릴 것인지를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선택이 후자가 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망해가는 대한민국”에서 “나의 인생 지키기” 위해서는(고은강), 달리 말해, 이윤 추구와 약육강식, 물상화가 극한으로 치달은 자본주의에서 진정으로 인간답게 생존하기 위해서는, “능력주의”와 “공정”의 게임룰에 따라 각자도생하기보다,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근본적으로 도전해야 한다. ‘2030 세대’가 극우화되고 있다는 오늘 한국에서 이것은 ‘구좌파’의 망상일 뿐일까? ‘밀레니얼 사회주의’(샌더스, 코빈 등)에 이어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Gen-Z 사회주의’(맘다니 등) 등은 ‘마르크스의 유령’이 오히려 21세기 야만과 아마게돈에 대한 유력한 현실적 대안으로 환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